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영 주 시

##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의안 번호	110
----------	-----

제출일자 : 2004. . .

제출자 : 영주시장

### 1. 제안이유

세계화·지방혁신 시대를 맞아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투자유치 지원체제(안 제2장)

- 투자유치 위원회 설치 및 임무(안 제3조)
  -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기본계획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 구성(안 제4조)
  - 구성 : 10인 이내(시 공무원, 시·도의원,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등)
  - 임기 : 2년, 연임가능

#### 나. 외국인 투자의 지원(안 제3장)

-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지원의 범위(안 제9조)
  -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 대주주
  - 총 지원금액을 당해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범위내 지원
- 지방세 감면(안 제10조)

- 4 -

- 영주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금융지원(안 제11조)
  -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제2항에 의거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
-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안 제12조)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임대 및 특례 적용
- 입지지원(안 제13조)
  -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 투자가 희망하는 지역,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
- 고용보조(안 제14조)
  -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 지원
- 교육훈련 보조(안 제15조)
  -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내 지원
-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안 제16조)
  -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시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국가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른 지원
  - 도가 지원하는 경우 도에서 결정한 부담비율에 따른 지원
-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안 제17조)
  -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안 제18조)
  -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

**다. 국내기업 투자지원(안 제4장)**

-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안 제19조)
  -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 국내기업 지원대상(안 제20조)

-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으로
  - 기업유치촉진지구내 입주하는 기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국내기업 지원의 준용(안 제21조)
  - 기업유치촉진지구내 입주 기업의 경우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규정)을 준용
-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안 제22조)
  -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국내투자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23조)
  -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지원

**라. 투자유치 진흥기금(안 제5장)**

-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출연(안 제24조)
  -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 기금의 사용(안 제25조)
  -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
  -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 가액과의 차액

**3. 자치법규안 : 불임**

**4. 입법예고**

- 기 간 : 2004. 3. 19 ~ 4. 8 (21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5. 참고사항 : 불임**

- 조문별 다른 자치단체 사례 비교표
- 관련법령(발췌)

##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
2. 영주시의회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8 -

②임명위원 및 시·도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9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①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②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시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영주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입지지원) ①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 10 -

②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전용 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8조(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9조(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타지역 소재 공장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0조(국내기업 지원대상)** 국내기업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 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업유치촉진지구내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 산업지원서비스업
3.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시장은 기업유치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인프라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 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2 -

**제23조(이전기업 지원)**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장 투자유치 진흥기금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 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 보조금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장 보 칙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

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③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실적보상)** ①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14 -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 법 예 고

- ☐ 조 례 명 :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476호 및 영주시청 홈페이지  
(2004년 3월 19일)에 게재
- ☐ 예고기간 : 2004. 3. 19 ~ 2004. 4. 8 (21일간)
- ☐ 의견제출 : 없음

# 조문별 다른 자치단체 사례 비교표

(2004. 2월말 현재)

우리시	진해시	목포시
<p><b>조례명칭</b>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p> <p><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li> <li>2.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li> </ol> <p><b>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b></p> <p><b>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b>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의 유치에 관한 주요사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li> <li>2.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li> <li>3. 국내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li> <li>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li> <li>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li> </ol> <p><b>제4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b>조례명칭</b> 진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2000. 6. 13제정)</p> <p><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li> <li>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li> <li>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li> </ol> <p><b>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b></p> <p><b>제3조(투자유치위원회)</b>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해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p> <p>⑤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li> <li>2.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li> <li>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li> </ol>	<p><b>조례명칭</b> 목포시국내기업및투자유치를 위한지원조례(2002. 12. 30)</p> <p><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으로 유치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투자를 말한다.</li> <li>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li> <li>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li> <li>4. “전략산업”이라 함은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li> </ol> <p><b>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b></p> <p><b>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b>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사회국장이 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포시의회 의원</li> <li>2.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li> <li>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이나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li> <li>4.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li> </ol> <p>④목포시의회 의원인 위원과 목포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p>

우리시	진해시	목포시
<p>1. 시 소속 공무원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p> <p>2. 영주시의회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p> <p>3. 투자유치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p> <p>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p> <p>②임명위원 및 시·도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p> <p>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p> <p>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일시 및 장소</li> <li>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li> <li>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li> <li>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li> <li>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li> </ol>	<p>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p> <p>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매년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율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각각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 으로 하고, 그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⑤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p> <p>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li> <li>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li> <li>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li> <li>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li> <li>6. 기타 시장이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및 유치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제5조(위원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목포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우 리 시	진 해 시	목 포 시
<p>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영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b>제7조(실무협의회)</b>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p> <p><b>제8조(민간전문가 활용)</b> ①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b>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b></p> <p><b>제9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b> ①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 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p> <p>②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시비를 포함 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b>제10조(지방세 감면)</b>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영주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b>제11조(금융지원)</b>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p> <p><b>제12조(공유재산 임대 및 대각특례)</b>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대각에 대하여는 영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b>제13조(임지지원)</b> ①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영주시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p>	<p>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 시설 이전보조금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b>제7조(민원처리의 특례)</b>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p><b>제3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b></p> <p><b>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b> ①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0분의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p> <p>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b>제9조(지방세감면)</b>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진해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p> <p><b>제10조(금융지원)</b>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3조 제2항의 규정 및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p> <p><b>제11조(공유재산임대 및 대각특례)</b>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각 한 토지 등의 매입 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 하는 경우 대부분 감면율은 진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12조(임지보조금)</b>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b>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b></p> <p><b>제6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b>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b>제7조(지방세의 감면)</b>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목포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b>제8조(금융지원)</b>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p> <p><b>제9조(임지보조금)</b>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 희망 지역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p>



우리시	진해시	목포시
<p>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②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b>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b>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p> <p><b>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b>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p> <p><b>제13조(고용보조금)</b> ①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 하되 사업개시후 3년 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p> <p><b>제14조(교육훈련보조금)</b>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p> <p><b>제15조(시설보조금)</b>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과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b>제10조(고용보조금)</b>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등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b>제11조(교육훈련 보조금)</b>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b>제12조(시설보조금)</b> 시장은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다.</p>

우리시	진해시	목포시
<p><b>제1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b>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 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b>제17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b> 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li> <li>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li> <li>3.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li> </ol> <p><b>제18조(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b>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p><b>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b></p> <p><b>제19조(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b> 시장은 타지역 소재공장의 공장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b>제4장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b></p> <p><b>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b>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은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투자비율 및 지원금액 등은 제8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 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li> <li>2.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 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li> <li>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li> </ol> <p><b>제17조(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b> ①시장은 제16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정산업단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차액보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임지적용 기준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p> <p>③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p> <p><b>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b></p> <p><b>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b> 시장은 도외 공장의 국내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b>목포시</b></p> <p><b>제13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b>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li> <li>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li> <li>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li> <li>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li> </ol> <p><b>제14조(공유재산임대 및 대각특례)</b>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등 대입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토지등의 임대여 따른 대부로 감면등은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15조(컨설팅비용 지원)</b> 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b>제16조(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b> ①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시의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p> <p><b>제4장 국내기업 지원</b></p> <p><b>제17조(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등)</b> ①시장은 타지역 소재 공장의 시내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p>

우 리 시	진 해 시	목 포 시
<p>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지역</p> <p><b>제20조(국내기업 지원대상)</b> 국내기업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내 기업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li> <li>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li> <li>3.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b>제21조(입지보조금등 현금지원)</b>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를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li> <li>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인프라시설비용 시설보조금</li> <li>3.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b>제22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b> 시장은 기업유치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b>제23조(이전기업 지원)</b>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p> <p><b>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b> ①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2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 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p> <p><b>제19조의2(공장부지의 대부 및 대각)</b> ①시장은 초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장부지의 50%를 대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lt;신설 2003. 12. 31&gt;</p> <p>②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대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진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신설 2003. 12. 31&gt;</p> <p><b>제20조(이전보조금)</b> ①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 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p> <p>②타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b>제18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b> 시장은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b>제19조(타 지역에 소재 본사 또는 본점의 이전 지원)</b> 시장은 우리시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본사 또는 본점을 우리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전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우리시	진해시	목포시
<p>제5장 투자유치 전용자금</p> <p>제24조(투자유치전용자금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투자유치전용자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전용기금으로 출연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5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각호 1의 용도에 사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li> <li>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li> <li>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금</li> <li>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6장 보칙</p> <p>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1조 내지 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p> <p>제27조(금융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6장 보칙</p> <p>제21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시장은 제12조 내지 제20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p>목포시</p> <p>제5장 보칙</p> <p>제20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을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21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우대 지원할 수 있다.</p> <p>제22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p>

우리시	진해시	목포시
<p><b>제28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b>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b>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b>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하게 할 수 있다.</p> <p><b>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b>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 한 경우</li> <li>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li> <li>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li> <li>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 하지 아니한 때</li> </ol>		<p>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p> <p><b>제2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b>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실행 사실을 확인한 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에 대하여 매입계약 후 5년이내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10년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매각대금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p> <p>⑤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p> <p><b>제24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등)</b>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li> <li>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li> <li>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li> <li>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li> </ol>

우리시	진해시	목포시
<p>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p> <p>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p> <p>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p> <p>8.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p> <p>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감제징수 할 수 있다.</p> <p>③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p><b>제31조(실적보상)</b> ①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 할 수 있다.</p> <p>②제1항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22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b>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p><b>제23조(시행규칙)</b>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개정 2003. 12. 31&gt;</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 &lt;2003. 12. 31&gt;</b></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p> <p>6. 공장시설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p> <p>7. 지원받은 후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p> <p>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b>제25조(자본유치 실적보상)</b>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p> <p><b>제26조(시행규칙)</b>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관 련 법 령 (발췌)

### □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 ○ 법 제9조(안 제10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관련)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 법 제3조제2항(안 제11조 금융지원 관련)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대주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한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 ○ 법 제13조(안 제12조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특례 관련)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기타 국, 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계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 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동법 제3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동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⑥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을 제36조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을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28 -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 등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있는 토지 등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 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경 제19조제3항)

③법 제13조제6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고용중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및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경 제19조제7항)

⑦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 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 법 제14조제1항(안 제13조,제15조 입지·교육훈련 및 각종 보조금 관련)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읍자, 토지등의 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법 제14조제4항(안 제14조 고용보조금 지원 관련)

-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을 말한다(령 제20조제4항).

○ 법 제14조의2(안 제1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관련)

① 국가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 소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일 것
  - 나. 사업과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일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지원용도(제20조의2) ①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본조신설 2004.1.13]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제17조(안 제18조 외국인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관련)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란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표 오른쪽란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중 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 "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2의 외국인투자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 장( 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 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 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 32 -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